

01 행정이론과 학자 및 그 특성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행정행태론 - 마리니(Marini), 정치행정이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어윅(Urwick), 정치행정이원론, 형평성 강조
- ③ 비교행정론 - 리그스(Riggs), 정치행정이원론, 합법성 강조
- ④ 신공공관리론 - 오스본(Osborne), 정치행정이원론, 성과 강조

해설

- ① (×) 'Marini, 정치행정이원론, 민주성 강조'는 신행정론과 관련된다. 행태주의는 정치행정2원론적 시각이다. 행태주의와 관련하여 행정이념으로서 합리성을 강조했다고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행태주의는 '가치'나 '이념'의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행태주의 학자 사이먼은 행정을 집단적·협동적 의사결정으로 보았고 의사결정은 목표와 수단에 관한 결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합리성에 관해 실질적 합리성(내용적 합리성, 최적수단 선택)과 절차적 합리성을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절차적 합리성(최적 수단 선택은 곤란하나 충분한 이성적 사유과정·절차는 거침)을 강조하였다.
- ② (×) 어윅과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관리론과 관련되지만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행정관리론은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 ③ (×) 비교행정론은 정치행정이원론에 해당하며, 합법성 강조와는 거리가 멀다. 비교행정론에 대해 정치·행정 1·2원론 여부를 명확히 확정하지는 않지만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권력의 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 정책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므로 정치·행정2원론으로 본다("행정에 대한 이론은 동시에 정치에 대한 이론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가우스(J. Gaus)의 견해와는 구별해서 알아들 것).
- ④ (○)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역할로서 노릇기(정책집행, 관리기능) 기능보다 방향키 기능(정책결정, 전략·기획기능)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은 방향키 기능이 아니라 노릇기 기능과 관련하여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므로 정치·행정2원론으로 본다.

답 ④

[관련기출] 행정학 이론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4 행정고시

- ① 행정행태론 - Simon, 정치·행정1원론, 민주성 강조
- ② 행정관리론 - Urwick, 정치·행정2원론, 능률성 강조
- ③ 발전행정론 - Weidner, 정치·행정2원론, 효과성 강조
- ④ 비교행정론 - Riggs, 정치·행정2원론, 형평성 강조
- ⑤ 신공공관리론 - Osborne, 정치·행정2원론, 합법성 강조

답 ②

[관련기출]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2018 경찰간부

- ① 신행정론 - 정치·행정이원론 - 사회적 형평성 강조
- ② 발전행정론 - 정치·행정이원론 - 정책 효율성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 - 정치·행정이원론 - 공공가치 강조
- ④ 행정행태론 - 정치·행정이원론 - 정책 효과성 강조

답 ①

02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굿노(F.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 ② 윌슨(W. Wilson)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 ③ 사이먼(H. Simon)은 고전적 조직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 ④ 테일러(F.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해설

- ① (×) '표현' ⇨ 집행·실행·실천, F. Goodnow는 '정치와 행정 (Politics and Administration : 1900)'에서 정치는 국가 의사(의지)의 결정작용(국가여지의 표명과 정책 구현)이고, 행정은 국가 의사의 집행(실행·실천)작용이라고 보았다.
- ② (○) W. 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정책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다.
- ③ (○) H. Simon은 고전적 조직원리들을 경험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원리접근법을 형식과학이라고 비판하고, 이론이나 법칙의 정립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엄격한 경험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④ (○) F. Taylor는 시간과 동작 연구를 통해 인간의 생산 활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분석하여 그에 입각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절약과 능률을 위한 최선의 방법과 수단(one best way)을 찾고자 했다.

답 ①

[관련기출]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서울고급

- ① 굿노(F. J.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작용이라고 주장했다.
- ② 테일러(F. W.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 ③ 사이먼(H. A. Simon)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 ④ 굴릭(L. H. 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답 ③

[관련기출] 정치·행정2원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2018 해경간부

-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제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 Wilson)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리 중심이어야 한다.

답 ④

03 과학적 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의 기본 전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과학적 분석에 따라 유일무이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② 생산성 향상의 혜택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돌아간다.
- ③ 인간은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 ④ 조직의 목표는 명확하다.

해설

- ① (○) 시간·동작 연구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의 최선의 방법과 수단(the one best way)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 과학적 관리와 공평한 이익 배분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 ③ (×) 인간은 외재적 보상, 경제적·물질적 보상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 경영자와 근로자의 목적은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이 화합관계는 근로자의 생산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 관리법의 기본전제였다. 따라서 테일러는 기업과 근로자 양자의 목적을 일치시키려면 생산실적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주어 근로자의 경제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과급제, 특히 차별성과급제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과학적 관리론 - 경제적 - 외재적 보상(동기부여의 외재성, 경제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인간관계론 - 사회인 - 외재적 보상(동기부여의 외재성, 사회심리적 유인과 직무수행의 교환)
  - 후기인간관계론 - 자아실현인 - 내재적 보상(동기부여의 내재성,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통합)
- ④ (○)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개발(작업의 표준화)하고 반복적 훈련을 중시하였다.

답 ③

[관련기출]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경찰간부

- 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라고 보았다.
- ③ F. Taylor는 이러한 접근방법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 ④ 호손 공장의 연구(Hawthorne Studies)가 이러한 접근방법의 실증적 근거가 되었다.

답 ④

[관련기출] 다음은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04 국회8급

- ① 조직 내의 인간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한다.
- ② X이론의 인간형에 입각한 것이다.
- ③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유일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④ 과학적 관리학파의 연구활동은 고전적 행정학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 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사회적 능률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답 ⑤

04 다음 중 고전적 인간관계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산성 향상에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② 생산성 향상은 작업환경의 변화보다도 근로자들이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 ③ 작업환경의 변화에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④ 이 실험은 애초에 생산성 향상보다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해설

- ① (○) 실제 작업 조건과 작업 효율성과 사이에 직원들의 감정과 의욕 등 주관적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태도는 자연발생적인 비공식적 인간관계, 비공식 집단의 집단규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집단규범이 기업의 조직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 ② (○) 생산량은 일반적인 지시나 종업원의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사회적 상황(직장에서의 감정, 희망, 가치관, 불안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태도나 감정에 의한 생산성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 ③ (○)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문화'란 비공식 집단의 집단규범을 의미한다.
- ④ (×) 호손실험은 애초에 과학적관리법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오히려 인간 심리상태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실험이었다.

답 ④

[관련기출] 다음 중 호손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6 서울7급

- ①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 ③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물리적 작업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계승한다.
- ④ 본래 실험 의도와 다르게 작업의 과학화·객관화·분업화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답 ①

[관련기출] 다음 내용 중 호손 실험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경제9급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은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동기를 부여받는다.</li> <li>㉡ 조직관리는 기술적 숙련성뿐 아니라 사회적 숙련성도 필요하다.</li> <li>㉢ 조직 성원은 개인으로서 행동하기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한다.</li> <li>㉣ 노동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발하고 훈련하며 개인적인 노력을 자극, 격려하여 협동적인 노력을 발전시킨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 ㉣</li> <li>② ㉠, ㉡, ㉢</li> <li>③ ㉠, ㉢, ㉣</li> <li>④ ㉠, ㉡, ㉢, ㉣</li> </ul> |
|---|---|

답 ③

05 사회학적 신제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 내 제도의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② 합리적 조직행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③ 제도를 법규에만 한정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 ④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 ①② (X) 인간이나 조직의 행위는 합리성·효율성보다 사회문화적 제도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제도 채택의 유용성 판단은 경제적 합리성·효율성보다는 사회로부터 얻는 정당성의 기준에 의한다(단 기술적 능률성이 높은 경우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쉬움). 비합리적인 정책이 형성·유지되거나 합법적인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예) m<sup>2</sup>(법제화된 표준적 도량형)보다는 평(전통적 도량형) 사용
- ③ (X) 구제론은 제도를 법령 등 공식적 제도로 한정하지만, 신제론은 비공식적 제도까지 포괄하여 파악한다. 사회학적 신제론은 제도의 공식적 측면보다는 규범, 문화, 상징체계, 의미 등 비공식적 측면, 특히 당연시되는(taken-for-granted) 신념과 인지구조(cognitive schema)에 초점을 맞춘다.
- ④ (O) 조직은 합리성·효율성보다 사회규범적 환경(제도적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직 생존의 기초라고 보며 환경의 기대에 대해 의례적 동조를 하게 됨. 예) 연구개발부서가 설치되면 외부에서 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므로 대부분의 조직은 연구개발부서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경우

답 ④

06 퍼트남(R.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론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와 관련하여 남부의 성공하지 못한 지역과 북부의 성공적인 지역을 비교 연구한 결과이다.
- ②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 금융이 있다.
- ③ 사회자본은 스스로 창출되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되고 나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격을 지닌다.
- ④ 사회자본이란 참여자들이 공동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한다.

해설

- ① (O) 퍼트남(R. D. Putnam)은 남부와 북부 이탈리아의 비교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발전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탈리아 남북부가 보여주는 현저한 민주주의 발전의 차이를 두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의 서로 다른 양상을 통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는 개방되고 확장적인 연결망을 기초로 1차 집단을 넘어선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시민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사체의 활성화의 기반에는 모르는 타인과의 믿고 협동할 수 있는 "일반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높은 일반적 신뢰와 참여적 시민문화는 국가 기구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제도적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 반면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가족 및 친족과 같은 제한된 상대를 중심으로 강하고 폐쇄적인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자발적 결사체들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강한 내집단 신뢰가 타 집단은 물론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두 지역이 보여주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공고화 수준과 연결된다. 즉 퍼트남의 결론은 확장적·개방적인 연결망이 풍부할수록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발달해 있으며, 이 경우 민주적 정치제도는 물론 경제적 번영에도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② (X) • R. Putnam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 사회적 신뢰(믿음), 협동적 Network(연계관계), 호혜적 규범

- ㉠ 사회적 신뢰(믿음) : 공동체 구성원 사이, 정부와 시민 사이에 형성된 신뢰.
- ㉡ 사회적 네트워크 :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 수평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는 그 연대가 강할수록 사회자본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러나 후원자-고객관계 등 수직적으로 조직화된 네트워크는 그 연대가 강할수록 사회적 자본에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호혜적 규범 : 시민들 사이에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균형화된 호혜관계, 일반화된 호혜관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일방적 관계나, 가족·동창 등 특수 집단 내에서만 도움을 주고받고 다른 집단은 차별하는 특수화된 호혜관계는 공동체 전체의 사회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음.

- ③ (O) 사회자본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창출되고 장기간에 구축되며 상당한 학습비용을 수반한다. 또한 구축되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성향을 지닌다.
- ④ (O)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을 사회자본으로 보아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제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다.

답 ②

[관련기출] 사회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의 설명이 틀린 것은? 2017 국가9급

- ① 사회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다.
- ② 퍼트남(R. D. Putnam) 등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자본(시민공동체 의식)이 지방정부의 제도적 성과 차이를 잘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 ③ 정밀한 사회적 연결망은 신뢰를 강화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며,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④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한 과도한 대외적 개방성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답 ④

07 정책수단의 한 형태인 바우처(voucher)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위한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 ②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 또는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④ 저소득층에게 식품, 교육 등의 복지제공을 위해 종종 사용된다.

해설

- ② (○) 바우처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결탁(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 또는 바우처 전매(타 이용자가 사용하도록 바우처를 파는 경우) 우려가 있다. 전자바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 ③ (×)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자가 소수이면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곤란하다.
- ④ (○) 바우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을 장려할 경우에 사용된다.

• 바우처 제도의 장·단점

장점	① 소비자의 구입부담 완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소비 장려가 필요한 민간부문의 활성화. ② 공급자 간 경쟁 촉진과 서비스 질 향상, 공급자와 정치인·정부관료와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 독점 예방. ③ 전자 바우처의 경우 투명한 결제시스템으로 부정 방지. ④ 자유·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지지 획득 가능(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시장의 자율성 침해가 적기 때문).
단점	① 공급자가 소수이면 비효율적임, 민간 공급자 측에서 서비스 수요량의 예측과 파악 곤란. ② 바우처의 전매 및 서비스 누출(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상소비자의 불합리한 선정, 바우처 오·남용에 대한 감독 곤란), ③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성 담보 곤란 ④ 현실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

답 ③

[관련기출] 바우처(voucher) 제도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010 전환특제(하)

- ① 생산과 공급이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② 명시적 바우처에는 쿠폰방식과 카드방식이 있다.
- ③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④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등으로 정책효과를 발생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답 ③

08 다음은 정부를 논의할 때 거론되는 다양한 설명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주는 상황에서 형성된 배타적 이익을 지대(rent)라고 한다.
- ②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에서는 공무원의 규모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증가한다고 주장된다.
- ③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공익을 위해 제한하지는 사상이다.
- ④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주장에서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해설

- ① (○) 지대(rent)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는 데 따라서 정상이윤(기회비용) 이상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윤이다. 경쟁체제에서는 초기에 지대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기업의 참가에 의해 생산증가 및 가격하락으로 곧 소멸하지만 인허가제 등 비경쟁체제에서는 정부규제로 인해 경쟁압력이 없으므로 지대가 소멸하지 않는다. 정부의 경쟁적 규제(진입규제·인허가제)를 통해 독점권이 부여(제도적 독점)되면 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얻기 위한 로비활동 등 지대추구행위가 발생한다.
- ② (○) 파킨슨법칙은 공무원 수가 본질적 업무량(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량)의 유무·경중·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 ③ (×)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기반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로 19세기의 자유방임적인 자유주의의 결함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려는 사상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 신자유주의

- ① Keynesian 이후 탄생하여 유럽좌파에 의하여 지지되어 오던 복지국가사상이 복지국가위기론(비효율, 저성장, 고실업, 도덕적 해이)이라는 한계에 부딪히자, 그 대안으로 모색된 1990년대 유럽 우파정권의 통치노선으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를 기치로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완화, 정부역할 축소, 공공부문의 시장화, 노동의 유연화(정규직 축소, 계약임용·임시고용 등 탄력적 고용, 성과급적 보수), 자본이동에 대한 대외적 개방, 국제적 기준 준수 등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신혁명운동.
- ② 기본적으로 시장기능을 중시하되(자유주의), 시장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정한 제도나 규칙을 형성(rule-making)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라 함. 시장우선주의(자유시장을 자원배분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개혁촉진을 위한 최적 메커니즘으로 파악), 최소정부론(정부실패에 대응한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개입의 축소), 복지의 민간화, 자율적인 시민주도사회, 경제적 개인주의, 불평등의 용인, 기업가적 정부 등을 강조.

- ④ (○) 공유재의 비극은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던 이기적인 합리인을 전제로 한다. 공유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각 개인이 이기적으로 공유재를 과다 사용하게 되면 고갈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경합성)이 발생함을 설명한다. 이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과도 관련된다(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답 ③

09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 ② 비영리단체 형태의 조직만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 ③ 무급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는 매년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고용 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①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
- ②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④ (×) 사회적 기업법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답 ①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8조 1항)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인증 취소시 3년간 재인증 불가).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춘 것. \* 반드시 법인 형태의 조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시행령 8조)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③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조직의 주된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시행령 9조)
취약 계층 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100 이상
	일자리 제공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10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제공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100 이상
지역 사회에 공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100 이상일 것</li> <li>㉡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100분 이상일 것</li> <li>㉢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100 이상일 것</li> </ul>

- ④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것.
- ⑤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⑥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춘 것.
- ⑦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
- ⑧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춘 것.

[관련기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회8급

- ①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 ②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 ③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다.
- 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답 ④

[관련기출] 현행 제도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1 지방7급

- ①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그 일부를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있다.
-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④ 설립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②

10 정책집행에 대한 하향식 접근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모어(Elmore)는 하향식 접근법을 후향식 접근(backward mapping)이라고 표현하였다.
- ②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④ 정책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해설

① (X) Elmore는 하향적 집행을 전향적 집행(forward mapping), 상향적 집행을 후향적 집행(backward mapping)이라고 표현했다.

■ 하향적 집행론과 상향적 집행론

구분	하향적 집행론(Top-down Approach)	상향적 집행론(Bottom-up Approach)
의의	① 정책집행의 실패를 막고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로 바람직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규범적 처방 제시 ② 정책집행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수단적 행위로 인식.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파악.	① 정책집행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험적 실증적 연구. ②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이해. 일선관료와 대상집단의 입장에서 파악.
특징	① 정치·행정2원론과 합리모형에 근거, 집행의 비정치성 ② 정책결정자의 관점 ③ 규범적 처방의 제시 ④ 거시적·연역적 접근	① 정치·행정1원론과 점증모형 ② 일선관료 중시 ③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 ④ 미시적·귀납적 접근
연구 목적	성공적 집행의 좌우요인 탐구(거시적·연역적 연구) 정책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다룸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인 및 정책집행 실패요인 파악	집행현장의 실제 상태를 기술·설명(미시적·귀납적 연구) 정책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집행현장을 더 중시
Elmore	전방향적 집행(forward mapping)	후방향적 집행(backward mapping)
Berman	정형적 집행(programmed implementation)	적응적 집행(adaptive implementation)

②③ (O) ■ 효과적 정책집행을 위한 이상적 조건(하향적 접근) - 사바티어(P. Sabatier)와 마즈매니어(D. Mazmanian)

- ① 정책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일 것
- ② 정책내용으로서 법령은 명확한 정책지침을 지니며, 대상집단의 순응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것(법적 구조화).
- ③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할 것.
- ④ 결정된 정책에 대해 조직화된 이익집단, 유권자, 입법가, 행정부의 장으로부터 지속적 지지를 받을 것
- ⑤ 정책목표는 안정적이어서, 집행과정 동안 법령에 규정된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하며, 상충되는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기존의 정책이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것

④ (O)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여 파악(정치·행정2원론)하며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의 선택을 강조하는 합리모형을 배경으로 한다. 정책결정자가 정책과정의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고전적 접근방법으로 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은 성공적 집행의 핵심조건이며 집행자의 재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답 ①

[관련기출] 정책집행의 하향적 접근방법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2012 국회9급

- ① 정책집행 담당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정책결정 내용은 타당한 인과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 ③ 정책목표의 우선순위가 명료하여야 한다.
-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여야 한다.
- ⑤ 정책이 집행되는 동안 목표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

답 ①

[관련기출]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 서울9급(1)

- ①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는 명확하다.
- ② 엘모어(Elmore)는 전향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 ③ 버먼(Berman)은 정형적 집행이라고 하였다.
- ④ 일선관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 한다.

답 ④

[관련기출]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9급(성)

- ① 대표적인 모형은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이다.
- ②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③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④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답 ③

11 조직 내 사회적 압력으로 인하여 비판적인 사고가 억제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결국,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되는 현상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① 공유제의 비극
- ② 집단사고
- ③ 님비(NIMBY)현상
- ④ 포획현상

해설

• 집단사고(group thinking) :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각자의 목표나 가치, 영감(inspiration), 창의력 등이 발현되지 못하고 하나의 동일한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의사결정성향을 말한다. 이는 흔히 집단착각 또는 도덕적 환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성원들의 응집성이 높고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나타나는 집단동조 의식이나 그룹규범을 말한다. 이 경우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만장일치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며, 획일적인 사고와 집단규범에 대한 강한 애착감이 나타나게 된다.

답 ②

12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비용에 비해 총편익이 큰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가정한다.
-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③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 ④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크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해설

① (○)  $B > C$  :  $NPV > 0$  또는  $B/C > 1$   
 ③ (○) 할인율(discount rate)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교환비율이다. 대안의 비교평가를 위해 미래의 비용과 편익을 동일시점인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명확한 할인율 도출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④ (×) 할인은 이자 산정방식을 거꾸로 하여 계산한다. n년 후의 미래가치가 A인 경우 할인율이 r이라면 그 현재가치는  $\frac{A}{(1+r)^n}$ 이다.  
 • 총편익의 현재가치(present benefit) =  $B_0 + \frac{B_1}{1+r} + \frac{B_2}{(1+r)^2} + \frac{B_3}{(1+r)^3} + \dots + \frac{B_n}{(1+r)^n} = \sum_{i=0}^n \frac{B_i}{(1+r)^i}$  ( $B_n$  : n년도 편익,  $r$  : 할인율)  
 따라서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과(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더 낮게 평가되고 따라서 총비용의 현재가치에서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뺀 값인 NPV(순현재가치)도 낮게 평가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답 ④

[관련기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답 ③

[관련기출] 다음 내용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7 해경간부

- ㉠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 ㉡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 어떤 한 대안의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다.
- ㉤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 ㉥ 내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 ㉦ 총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해설

㉠ (○)  
 ㉡ (○) BC비율법은 사회적 비용(眞의 편익)을 편익 감소에 넣느냐 또는 비용 추가에 넣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 ㉠ B=20, C=10인 경우 眞(-)의 편익(negative benefit)이 5인 경우 편익을 감소시키면 15/10, 비용을 추가시키면 20/15가 되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편익발생기간이 지난 후 다시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이나 사업 종료 후 또 다시 투자비가 소요되는 변이된 사업의 경우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도출되어 적용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 (×)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작아져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난다.  
 ㉤ (×) 내부수익률이 양(+)이라도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타당성이 인정된다.  
 ㉥ (×) 순현재가치법은 편익의 현재가치 총합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총합을 뺀 값이다. 총편익의 현재가치로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답 ①

13 다음은 로위(T. Lowi)의 분류에 따른 정책유형에 관한 예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분배정책 : 고속도로 건설
- ② 재분배정책 : 저소득층의 소득안정 정책
- ③ 규제정책 : 식품위생에 관한 정책
- ④ 구성정책 :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정책

해설

④는 구성정책이 아니라 배분정책의 사례이다.

답 ④

14 다음은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 ㉠ 사이먼(Simon)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지만 정책결정자는 최선의 대안을 추구한다.
- ㉡ 윌다프스키(Wildavsky)에 따르면,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수준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 ㉣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 따르면, 영감, 직관, 통찰력과 같은 초합리적 요소는 합리적 분석을 위해 배제되어야 한다.
- ㉤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에 따르면,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 ㉠ (×) H. Simon에 따르면,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므로 정책결정자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최적화 보다는 만족화 전략)
- ㉡ (○) A. Wildavsky 예산의 정치적 성격과 점증주의적 예산결정을 주장했다. 총예산규모는 뚜렷하게 점증적이며 예산은 전년도 예산(base)의 함수라고 보아 예산 결정은 과거의 지출수준을 토대로 점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 (○) 쓰레기통 모형에 따르면, 조직의 의사결정은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인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 쓰레기통 안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른 시각에 여러 과정을 거쳐 우연히 한 곳에 모여지듯이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가 어떤 극적인 점화계기(trigger event)에 의해 우연히 합쳐질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 (×)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 (○)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따르면 조직은 SOP(표준운영절차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반응목록, 행동대안목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며, 대안의 결과가 허용수준범위 내에 있으면 기존의 SOP에 의한 의사결정을 계속하며, 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운 SOP를 찾는데, 이 과정은 매우 느리며 SOP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질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가 얼마나 정교한지에 의해 결정된다.

답 ②

[관련기출] 정책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회6급

- ①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 분석인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은 합리모형보다는 조직과정모형과 정치모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② 드로(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은 기존의 합리적 결정 방식이 지나치게 수리적 완벽성을 추구해 현실성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③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 ④ 에치오니(Etzioni)의 혼합탐사모형에 의하면 결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합리적 의사결정모형과 점진적 의사결정모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이먼(Simon)의 만족모형에 의하면 정책담당자들은 경제인과 달리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답 ①

15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정책조정방식이론을 따른 것인가?

- ① 엘리트론                                      ② 다원주의론                                      ③ 조합주의론                                      ④ 계급이론

해설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국가조합주의 중 융합적 조합주의의 사례로 분류된다.

▣ 조합주의의 유형

	제3세계 및 후진자본주의에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주도하는 <b>이익대표체계</b> . 국가가 통치력 강화를 위해 강제로 편성한 것으로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b>이익집단의 통제된 참여</b> 를 기본요소로 하며, 이익의 상향적인 투입기능보다는 국가에 의한 <b>하향적인 동원과 통제</b> 를 중시. 이 경우 <b>조합은 국가의 보조적·종속적 기관</b> 이 됨.	
국가조합주의 (State Corporatism)	융합적 (inclusive) 조합주의	국가가 노동계급과 여타 사회세력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접근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강압적 수단을 사용. 지배세력 구성에서 <b>국가-자본-노동의 수평적 공존과 협조체제 형성</b>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제적 (exclusive) 조합주의	강압적 수단을 통해 노동계급을 탈정치화시키고 관료적으로 재조직화함으로써, 국가가 노동부분을 통제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 국가와 자본이 지배동맹을 형성하고 기업가집단 등의 이익표출활동은 허용하면서, 노동자·농민들의 이익표출활동을 탄압하거나 그들 집단의 지도부를 어용화시키며, 이익집단은 오히려 그 구성원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존재함.
사회조합주의 (Societal Corporatism)	서구의 선진민주주의의 <b>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유형</b> 으로 국가의 통치력 약화에 대한 <b>반작용</b> 으로 생성됨. 국가가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한 <b>이익집단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b> 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익집단과 국가 간 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도 <b>이익집단의 자율성</b> 을 본질로 함. 국가에 의한 하향적인 통제기능을 배제하고 <b>국가로의 상향적인 투입기능을 중시</b> .	

답 ③

16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하는 위생요인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무환경                      ② 임금                      ③ 동료 간의 관계                      ④ 책임감

해설

■ 허즈버그의 불만요인과 만족요인

불만요인(dissatisfier) = 위생요인(hygiene)	만족요인(satisfier) = 동기요인(motiv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만유발 또는 불만해소에 작용</li> <li>• 생산성 향상과 직접적 관계 없음(필요조건에 불과).</li> <li>• 불만요인 개선시 불만 없는 상태가 되며, 만족으로 연결되지 않음.</li> <li>• 환경·직무수행상황 vs 조직구성원</li> <li>• 직무 외적이고 물리적·환경적인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 또는 직무수행 동기유발에 작용</li> <li>• 생산성 향상과 직접 관련됨(충분조건).</li> <li>• 만족요인 불충족시 만족 없는 상태가 되며, 불만으로 연결되지 않음.</li> <li>• 직무 자체 vs 조직구성원</li> <li>• 직무 내재적·심리적 요인(내적 보상·자아실현)</li> </ul>
조직의 정책과 관리·관행·규칙, 감독(리더십의 질), 근무환경·작업조건, 근무시간, 정년, 지위나 직위, 신분안정(직업적 안정), 복지시설, 보수(임금), 대인관계(상사·동료·부하직원과의 인간관계)	직무상 성취감(자아실현)·인정감, 직무자체·직무내용(보람 있는 일), 성장·발전,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 승진, 자아개발, 직무성과, 책임의 중대(책임감), 칭찬

답 ④

[관련기출]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한 만족요인·동기요인으로만 구성된 것은?

2007 국회8급

- ① 보수, 대인관계, 작업조건                      ② 성취감, 책임감, 직무내용  
 ③ 보수, 직무내용, 작업조건                      ④ 승진, 직무내용, 대인관계  
 ⑤ 성취감, 대인관계, 작업조건

답 ②

[관련기출] 허즈버그(H.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론에서 제시하는 동기요인 내지 만족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10 국가9급

- ①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                      ② 상사로부터 직무수행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③ 보다 많은 개인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있다.                      ④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답 ④

[관련기출]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요인이 아닌 것은?

2016 행정사 / 2016 경찰간부

- ① 성취감    ② 책임감    ③ 보수    ④ 안정감    ⑤ 승진

답 ③

17 민츠버그(H. Mintzberg)가 제시한 조직구조의 기본 부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략부문(strategic apex)은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이다.  
 ②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은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③ 중간부문(middle line)은 업무의 표준화를 추구한다.  
 ④ 기술구조부문(technostructure)은 작업의 설계와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다.

해설

- ③ (×) 중간부문[중간개선] (middle line)과 연결되는 조정기제는 '산출의 표준화'이다.  
 업무[과업·작업과정]의 표준화는 기술구조(technostructure)와 관련된다.

■ 민츠버그의 조직형태 결정요인 중 조직의 구성부분

조직의 구성부분(Components)		조정기제	강하게 작용하는 조직유형
전략적점(strategic apex)	조직에 관한 전반적 책임을 지는 자 ⇨ 집권화 경향	직접적 감독(직접 통제)	단순구조
기술구조(technostructure)	조직 내 작업설계의 변경, 과정계획, 직원훈련담당전문가 ⇨ 표준화 경향	과업[작업]과정의 표준화	기계적 관료제
핵심운영(operation core)	재화·용역 생산의 기본작업에 직접 종사 ⇨ 전문화 경향	기술의 표준화	전문적 관료제
중간개선(middle line)	작업중추와 최고관리층을 연결 ⇨ 자기부서의 할거적 지배 강화(분권화, 사업단위분립)	산출의 표준화	사업부제
지원스태프(support staff)	위 네 부문에 대한 지원업무(공보실, 법률고문, 조사연구실) ⇨ 협동성·혁신	상호조정	임시체제

답 ③

18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문서주의                      ② 전문성                      ③ 카리스마적 권위                      ④ 상명하복

해설

- ③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형(ideal type) 관료제는 근대관료제를 의미하며 지배의 유형은 권위의 정당성 근거를 초인적 자질·능력에 대한 외경심에 두는 카리스마적 권위가 아니라, 법이나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합법적 권위를 중시한다.

• 지배의 유형(권위의 정당성 기준)과 관료제의 유형(형태)

지배의 유형	권위의 정당성 근거	관료제 유형	특징
카리스마적 지배	초인적 자질·능력에 대한 외경심	카리스마적 관료제	전통이나 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초인적 자질을 바탕으로 자의적인 지배.
전통적 지배	전통·신성함·미신	가산(家産)관료제	전통·선례를 바탕으로 혈연에 의한 세습적 지배.
합리적·합법적 지배	법규	근대관료제	법에 의한 지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지배.

답 ③

19 조직구조설계 유형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① 팀제 구조는 책임 및 권한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② 기능구조는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을 지닌다.
- ③ 사업구조는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기능구조에 비해 떨어진다.
- ④ 매트릭스 구조의 장점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있다.

해설

- ① (×) 팀제는 팀원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권한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구성원에게 책임이 분산되므로 무임승차자(free-rider)나 무사안일한 자가 있으면 업무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 ② (○) 기능별 구조는 같은 기능을 묶어서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직무분업과 구조설계가 가능하며, 일의 중복과 낭비를 막아 효율성을 높이므로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 ③ (×) 기능구조는 안정적인 환경과 일상적 조직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하다. 사업구조는 불확실한 조직 환경일 때나 비상상황적 조직기술을 사용할 때 적합하다. 사업부제는 사업별로 부서화한 후 각 사업부서 내에는 기능별로 부서화하므로 사업부서는 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특정 지역에 봉사하거나, 특정 고객에게 봉사할 때 필요한 모든 기능적 직위들이 모두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완결적 단위의 조직구조로서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므로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 기능부서 통제권한은 수직적으로, 사업부서 간 조정권한은 수평적으로 흐르는 2원적 권한체계를 구성하므로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답 ②

[관련기출]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6 서울7급

- ① 기능구조는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 ② 기능구조는 각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 ③ 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의 상위 집중화로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 ④ 사업구조는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답 ③

[관련기출]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와 비교하여 사업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가 가지는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15 서울7급

- ① 사업부서 내의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② 성과책임의 소재가 분명해 성과관리 체제에 유리하다.
- ③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 ④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기능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답 ④

[관련기출]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 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 ② 네트워크 구조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과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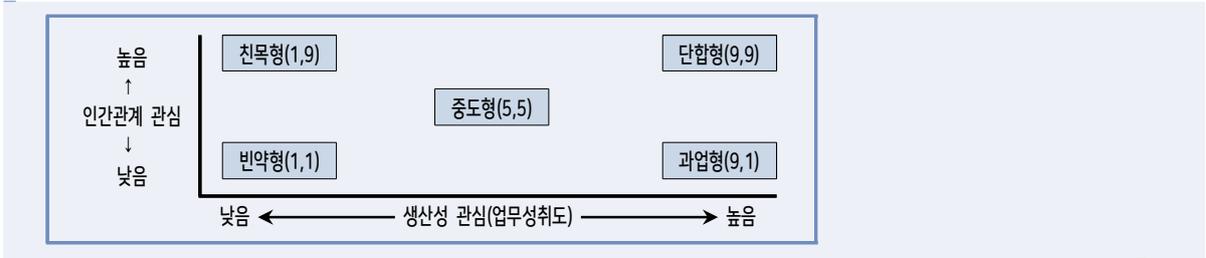
답 ①

20 리더십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이 제시하는 상황변수에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리더의 공식적 권한, 과업구조의 특성이 있다.
- ②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같이 보상을 기반으로 추종자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평등·자유·정의 등 고차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추종자들의 의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한다.
- ③ 행태이론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 ④ 블레이크와 모튼(Blake and Mouton)의 관리망(managerial grid) 연구에서는 과업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행태로 나타났다.

해설

- ① (○) 피들러(Fiedler)의 상황론 : LPC점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관계중심형과 점수가 낮은 관계중심형으로 리더십 유형을 구분. 상황의 유리성(변수 : 부하와의 관계, 지위권력, 과업구조)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과업중심형이 중간이면 관계중심형이 효과적이라고 봄
- ② (○) 변혁적 리더십 : 거래적 리더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동추구적·개혁적 리더십.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답을 구하도록 유도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고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선도함.
- ③ (○) 행태론 [행동유형론] :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가?' 보다는 '성공적인 리더에게서 보이는 리더십 행태는 어떠한가?'의 관찰가능한 리더의 행태를 분석하여 지도행태 유형론을 발전시킴.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이 있다고 보고 리더의 행태와 추종자들이 보이는 감정적·행태적 반응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유형에 맞추어 리더십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봄.
- ④ (×) 블레이크와 모튼(Blake and Mouton)의 관리망이론 : 리더십 유형의 두 차원인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에 따라 81개의 관리망 유형 제시. 다섯 가지 대표적인 리더의 행동을 빈약형[무기력형·무관심형] (impoverished), 과업형[생산지향형] (authority-obedient), 친목형 (country club), 중도형 [중용형·절충형·타협형] (organization man), 단합형 [팀형] (team management)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각각 효과적 지도유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조직에서 개발해야 할 지도자의 이상형은 단합형(team형)이라고 봄



답 ④

[관련기출]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지방7급

① 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한다.  
 ② 번스(Burns)의 거래적 리더십은 영감,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고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이다.  
 ③ 하우스(House)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 전에 부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④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은 직원지향적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이라고 규정한다.

답 ③

## 21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9년 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②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성은 확대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부여되는 정부기관이다.  
 ③ 책임운영기관 제도 설계의 이론적 기반은 신공공관리론이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 해설

- ① (○)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은 1999년(김대중 정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년부터 설치  
 ② (○) 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 책임운영기관은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조직형태로 집행 및 서비스 전달업무인 집행기능(rowing)을 결정기능(steering)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한 것. 결정기능을 수행하는 주무부장관은 최종적·법적 책임을,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운영기관장은 성과책임을 짐.  
 ④ (×) 책임운영기관 장은 임기제 공무원(소속책임운영기관장) 또는 정부직 공무원(중앙책임운영기관장)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 개방형임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임기는 2년~5년 범위)  
 •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 정부직(청장). 임기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 • 제7조(기관장의 임용)

-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으로 임용하려는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임용 여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답 ④

## 22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국민권익위원회      ③ 방송통신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 해설

#### • 위원회의 소속 구분

대통령 소속기관	헌법상 자문기구(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등
국무총리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협조조정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답 ③

[관련기출]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아닌 것은? 2014 서울9급 / 2012 국가9급 / 2016 소방간부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방송통신위원회

답 ⑤

[관련기출] 다음 중 대통령 소속기관은? 2019. 군무원

① 공정거래위원회      ② 방송통신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금융위원회

답 ②

[관련기출] 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2019 행정사

① 국민권익위원회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③ 공정거래위원회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⑤ 금융위원회

답 ②

23 정보공개청구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는 이 제도를 통해 청구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 ① (○)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청구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 예산 사용에 관한 정보도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비공개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 ③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일반법. 법률 제정 이전에도 헌법상 권리로 인정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 **정보공개대상인 공공기관**

- ㉠ **국가기관**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상 특수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답 ②

24 다음은 정부에 대한 이론 중 주인-대리인 모델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주인이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주인이 대리인보다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 A )이라 한다. 그런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대리인의 ( B )가 발생하게 된다. 이 모형을 정부에 적용하면 우선 국민이 주인이고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리인이다.

- ① A-정보의 비효율성, B-도덕적 해이
- ② A-정보의 비효율성, B-무임승차
- ③ A-정보의 비대칭성, B-도덕적 해이
- ④ A-정보의 비대칭성, B-무임승차

해설

• 주인-대리인 모형

- ㉠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 : 주인은 정보 부족, 대리인은 정보 보유
- ㉡ 대리손실 발생
  - ㉢ 역선택(불리한 선택)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자질·능력 없는 대리인 선택
  - ㉣ 도덕적 해이 :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감시·통제가 곤란한 상황에서 대리인이 성실한 노력을 하지 않음

답 ③

25 다음 중 감사원의 임무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직무감찰 대상은 공무원, 지방공무원, 한국은행 임원, 준공무원 등이다.
- ④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 ① (×) 감사원은 간접적 통제권을 갖는다. 시정등의 요구·권고, 개선등의 요구·권고만 가능하고 직접 시정조치나 개선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내용을 직접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 **감사원법 제33조(시정 등의 요구)**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이다. 따라서 '검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사한다'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옳다.

•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국가의 회계
-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 **감사원법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각호 생략)

③ ○

• 감사원법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23조 제7호에 규정된 자(① **한국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②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부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④ ○) 감사원법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답 ①

26 다음은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②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③ 직위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책무와 책임
- ④ 직군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

해설

④ (x)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은 직류이다.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답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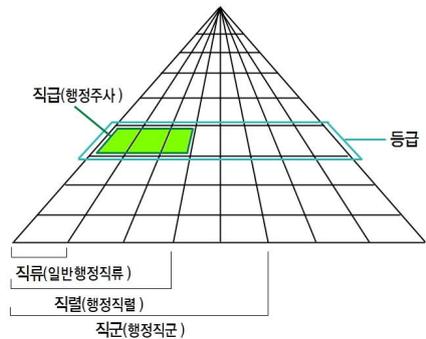
직위분류제의 구조



기준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류	직렬	직군	직급	등급
직무의 종류·성질	유사			유사	상이
직무의 책임도·곤란도	상이			유사	

직위분류제의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까지 구성은 **직위<직급<직렬<직군** 순이다.

↓  
직류



- ① **직위(position)** :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위분류의 최소단위(예 OO실장, OO국장, OO과장)
  - ② **직류(sub-series)**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예 일반행정직류, 법무행정직류, 재정직류 등)
  - ③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예 행정직렬, 세무직렬)
  - ④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위분류의 가장 큰 단위(예 행정직군·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 ⑤ **직급(class)** : (동일 직렬 내에서) 직무의 종류·책임도와 곤란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예 행정서기보, 행정서기, 행정주사보 등). 동일한 직급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가 지급됨. 수평적인 등급과 수직적인 직렬이 교차하는 공통부분.
  - ⑥ **등급(grade)** : (직렬과 직군을 초월하여) 직무의 종류·성질은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성·책임도 및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계급제의 계급에 해당.
- **직무등급** : 우리나라는 등급은 없고 실정법상 계급으로 표현했으나,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도 '직무등급' 개념이 도입되어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과 외무공무원은 직무등급이 적용되며 더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승격'이라 한다.

[관련기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2013 경찰간부

- ① 직위(position)란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② 직급(class)이란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을 말한다.
- ③ 직렬(series)이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 계열을 말한다.
- ④ 직군(occupational group)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답 ④



• **투사(주관의 객관화)(projection)** : 자신의 감정·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귀속·전가시키는 데서 오는 착오(예 공격적 성향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공격성을 발견하기 쉬움). 자기와 유사한 특성의 피평정자를 좋게 평가하는 유사성 착오도 이에 해당.

답 ②

[관련기출] 평정자인 A팀장은 피평정자인 B팀원이 성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의적이고 청렴하다고 평정하였다. A팀장이 범한 오류에 가장 가까운 것은?  
2010 국가9급 / 2008 경기9급

-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근접효과(recency effect)    ③ 관대화 경향(tendency effect)    ④ 선입견과 편견(prejudice)

답 ①

[관련기출] 어느 상관은 부하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평상시 출근 시간 준수 여부를 특히 강조하여 모든 평정 요소의 평정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무성적 평정 오류는 무엇인가?  
2013 해경간부

- ① 집중화 오류    ② 일관적 오류    ③ 근접효과    ④ 연쇄효과

답 ④

[관련기출] 인사과과를 위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 중, 평가자 자신의 감정이나 경향을 피평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귀속시키거나 전가하는 오류는?(예를 들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의심하거나 부정직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이다)  
2009 국가7급 경영학

- ① 주관의 객관화(projection)    ② 현혹효과(halo effect)    ③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    ④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답 ①

29 다음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은 몇 개인가?

- ㉠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기회 균등으로 평등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 업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 ㉠ (○) 실적주의는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공채시험을 통한 임용의 기회균등을 통해 평등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고려하지 못해 사회적 약자층의 공직기회까지 보장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형식적 기회균등에 그치고 수직적 평등의 확보는 미흡하다.  
㉡ (×)실적제를 채택한 미국은 업관제의 정치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지만 직업공무원제의 유럽 국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하면서도 미국의 실적제에 비해 정치적 중립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 (○)국민이 선거과정을 통해 지지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공직이 교체되므로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한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

답 ③

30 다음은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적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는 보수체계이다.  
②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것이다.  
③연공급은 근속연수, 경력 등 숙인적인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이다.  
④생활급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해설

- ① (×) 실적급(성과급)은 직무수행 성과·실적(생산량, 현실적 공헌도)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사후적 보수이다. 직무수행능력(현재능력 및 잠재능력)에 초점(skill-based pay)을 두고 지급(노동력의 가치를 기준)라는 보수는 직능급이다.



답 ①

[관련기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사회복지9급 / 2018 해경간부

① 직능급이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② 실적급(성과급)은 개인이나 집단의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이다.  
③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다.

답 ①

☒ 보수체계		
직무급	① 직무의 내용·공란도(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보수. 직위가 지닌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②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에 맞는 보수(job based pay.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를 통해 보수체계의 합리성(직무와 보수의 형평성)을 높임.	• 직무 중심 • 직위분류제·실적주의에서 중시
생계급 (생활급, 연령급)	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의 필요에 대응하는 보수. ② 지출과 상관성이 높은 공무원의 연령, 가족상황(가족 수, 자녀교육비)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에 관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음(모범적 고용주로서의 국가, 사회윤리적 요인 고려). 보수의 현실화와 적정화.	• 인간 중심 •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서 중시
근속급 (연공급)	① 근속연수·경력·경험 등 속인적(屬人的) 요소의 차이에 따라 지급(호봉). 연장자를 우선하는 동양적 가치관과 관련됨. ② 근무연수 증가에 따라 봉급이 증가하므로 근속을 장려하고 생계비 보장 기능도 하지만 정부 측의 인건비 부담 증가. ③ 폐쇄적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용한 제도이며 계급제·직업공무원제에서 강조.	
성과급 (능률급, 실적급)	① 직무수행 성과(생산량, 현실적 공헌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사후적 보수. ② 성과급과 능력급 : 성과급은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과도 반영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개인 능력을 중심으로 하며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능력급과 다름.	
직능급 (능력급)	① 직무수행능력(현재능력 및 잠재능력)에 초점(skill-based pay)을 두고 지급(노동력의 가치를 기준). ② 일을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보수 : 직무요소기준의 직무급(일에 대한 임금)과 인적요소기준의 근속급(사람에 대한 임금)의 혼합형태. 직무내용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 결정. 근무성적평가를 활용. ③ 보수를 직무수행능력과 연계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학습과 자기개발, 생산성 향상에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지님	
자격급	공무원이 지닌 학력, 자격증, 면허증 등에 표시되는 자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보수.	

31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식 예산편성으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 ② 비용편익분석 등 계량적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 ③ 의회와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해 실패한 제도로 평가된다.
- ④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맞춘다.

해설

- ① (×) 상향식 예산편성과 구성원의 참여 보장은 MBO의 특징이다. PPBS는 하향식·집권적 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PPBS는 전문 마코 중심의 운영과 지나친 집권화로 최고관리층의 권한을 강화(대통령에게 권한 집중, 부처 내에서는 국·과보다는 장관에게 권한 집중)시켜 하급공무원 및 계선기관의 참여가 곤란하다.
- ② (○) 비용편익분석·비용효과분석 등 분석적 기법을 활용해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따른 예산결정으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 ③ (○) PPBS의 복잡한 분석기법과 편성방법을 공무원이나 의회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예산심의기능과 재정통제의 약화를 우려한 의회는 PPBS에 반대 입장이고 정치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일선공무원들은 PPBS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구조의 강조가 함축한 조직개편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이 제도의 시행에 소극적이었다.
- ④ (○) 장기적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목표를 명료화하고 수단(집행과정)을 목표로 연결하는데 유용한 도구이므로 의사결정자들이 사업 목표에 관심을 가지고 목표성취 방법 등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답 ①

[관련기출] 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9급

-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답 ①

[관련기출]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9급

-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답 ④

32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예산은 장, 관, 항, 세항, 목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관 이상을 입법과목이라 한다.
- ②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지속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회계연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허용된다.
- ③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등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외국인 고용이나 건물 임차 또는 국공채발행과 같이 다년도에 걸쳐 국고 부담을 야기하는 채무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해설

- ① (×) 입법과목 : 장, 관, 항 / 행정과목 : 세항, 목
- ②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 ③ (○) 긴급배정이 가능한 경비
  -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예산의 배정) ⑤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6. 여비
    -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④ (○) • 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가 향후 국고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며, 향후 현금지출 예상액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국가 채무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25조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를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의 예산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가능하다.

④ 일반적인 채무부담(국방부의 군수지원, 대형항정 건조, 일반국도 건설 등)과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⑤ 예시 :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대지나 건물을 임차계약하거나 외국인기술자와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앞으로 국가가 채무를 지게 될 행위(계약)이므로 미리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

답 ①

[관련기출] 예산집행의 신축성 보장 제도에 대한 틀린 설명은? 2013 국회9급(수정)

- ①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예산의 전용은 입법과목인 장, 관, 항 사이의 상호용통으로 반드시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⑤ 예산이체제도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직무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변동되는 제도이다.

답 ②

[관련기출] 예산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바른 것은?

2011 전환특채(하)

-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된다.
- ② 장·관·항은 행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 간 용통인 이용(移用)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
- ③ 세항·목은 입법과목으로서 이들 과목 간 용통인 전용(轉用)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능하다.
- ④ 특별회계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답 ①

33 다음 중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 ②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배제한다.
- ③ 일반회계예산의 집행절차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일반회계예산은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해설

② (×) 기금은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를 허용하므로 동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아래 비교표를 토대로 출제되었다.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비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설치사유	국가의 일반적 재정활동	① 특정사업 운영, ② 특정자금의 보유·운용, ③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을 재원 무상급부 원칙 - 일반보상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정부출연금·민간임의출연금·외부차입금·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
수립 및 확정절차	부처의 예산요구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 편성		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통일성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동일성 원칙의 예외)	
완전성	정부 예산		예산 외로 운영(완전성의 예외)
집행상 재량성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특별회계가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큼)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이용(국회의결 필요), 전용 국가재정법정 사유에 해당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이하의 변경안은 국회 제출 불필요
결 산	감사원의 결산 검사, 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답 ②

34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간목표가 아니라 사업이나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를 접근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예산 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 ③ 사업선정의 기준과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관 간 비교가 곤란하고 그 결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 ④ 성과측정을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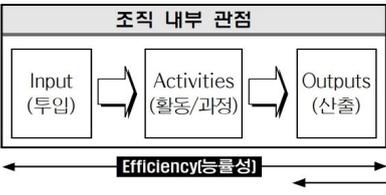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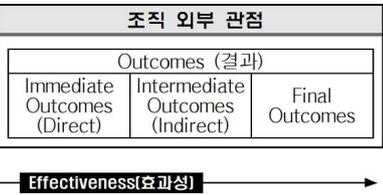
해설

‘성과주의 예산’이라 할 경우 1950년대 미국 연방정부의 PBS를 의미할 수도 있고 1990년대 이후 성과중심관리와 관련된 ‘신성과주의 예산’, ‘결과지향예산’, ‘성과지향예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출제자가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라든가 ‘최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라고 출제했어야 더 정확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PBS로 보면 ①④가 틀린 것이 되지만 신성과주의예산(New PBS)로 보면 ④만 틀리다.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로 보고 해설한다.

- ① (○) • PBS : 동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최종산출물을 찾기 힘들어 업무단위 선정이 어려움. 업무단위가 최종산출물이 아니라 중간산출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궁극적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수단(중간목표)과 목표(최종목표)가 전도되는 부작용 발생 가능.
- New PBS : 중간목표가 아닌 정부활동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을 물으며 그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므로 성과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임.
- ② (○) 과거 예산제도는 합법성·효율성·효과성을 추구했으나 New PBS는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재정사업 담당자에게 자원배분 관련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분권화된 인센티브체제를 구성한다. 대신 관리자들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의 재량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핵심 요소이다.
- ③ (○) 신성과주의 예산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정우선순위를 반영해 총액배분(top-down)하므로 전략적 배분이 가능하며 다년도 관점을 중시하므로 장기적 시계를 지닌다. 그러나 각 기관의 사업 부문별 자원배분에 자율성이 허용되고 기관별 업무 특성의 차이가 있어 통일적인 사업선정 기준·절차를 제시할 수 없으며, 기관별 노력과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르고, 성과측정의 난이도도 다르므로 정부기관 간 또는 사업 간 성과비교가 어렵다. 이로 인해 국가 전체 자원의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다.
- ④ (×) 성과측정을 위해 계량화가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지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답 ④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과 신성과주의 예산

구 분	성과주의 예산(PBS)	신성과주의 예산(NPBS)
시 대	1950년대 행정국가를 배경	1980년대 신행정국가(탈행정국가)를 배경
관심대상	<b>투입과 산출</b> 비용정보와 업무·활동의 연계 / 예산액 = 업무량 × 단위원가	<b>산출(output)과 결과(outcome)</b> 사업·활동과 결과(성과)의 연계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행정이념	<p>능률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직 내부 관점</p> <p>Input (투입) → Activities (활동/과정) → Outputs (산출)</p> <p>Efficiency(능률성)</p> </div>	<p>능률성 + 효과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조직 외부 관점</p> <p>Outcomes (결과)</p> <p>Immediate Outcomes (Direct) → Intermediate Outcomes (Indirect) → Final Outcomes</p> <p>Effectiveness(효과성)</p> </div>
투입 - 성과에 대한 경로가정	투입 - 업무수행 - 산출 - 성과간의 인과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단선적 가정’	투입이 자동적으로 의도한 성과나 영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복선적 가정’
성과책임	창출한 성과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	구체적 보상적 책임(성과에 대한 유인과 처벌)
자율과 책임	자율보다는 통제와 감독을 기본으로 한 개혁	자율과 책임의 유기적 연계
성과평가와 예산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 미흡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책임성 확보)
성과관리	단순한 성과관리(성과의 단순한 파악·측정)	성과의 제고
성과관점	정부(공무원) 관점	고객(만족감) 관점
회계방식	불완전한 발생주의(사실상 현금주의)	완전한 발생주의
연계범위	예산편성과정에서 국한	국정전반에 연계(인사, 조직, 감사, 정책 등)
결정흐름	상향적(분권), 미시적	집권과 분권의 조화(거시 + 미시) - 목표에 대한 집권적 통제와 수단의 분권화(각 부처 예산 운용 재량권 부여)
예산배분	각 부처별 분산요구(상향식)	국가 전체 차원에서 총괄배분(하향식)
예산규범	기술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배분적 효율성, 총량적 재정규율

3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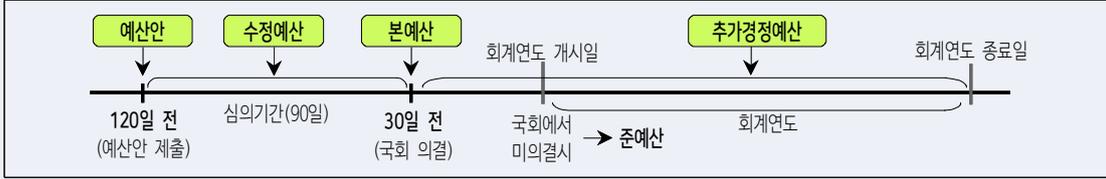
정부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① 수정예산                      ② 준예산                      ③ 가예산                      ④ 추가경정예산

해설

예산의 성립시기(예산절차)에 따른 분류

본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고 수정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예산 확정 전 즉 의회심의 중에 수정하여 제출되는 예산이며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에 추가로 편성하여 제출되는 예산이다.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의 예산제도로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이 있다.

답 ④

[관련기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9급

-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이다.
- ② 예산 팽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그 편성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 ③ 과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연도도 있었다.
- ④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되므로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답 ④

[관련기출] 예산의 종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7 대구7급

- ① 본예산-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 ② 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국회는 1개월 이내의 예산을 의결해주는 제도
- ③ 수정예산-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
- ④ 준예산-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 없이 특정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답 ③

36 듀브닉과 롬젝(Dubnick and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외부지향적이고 통제의 강도가 높은 책임성은?

-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해설

롬젝(B. Romzek)과 듀브닉(M. Dubnick)의 행정책임의 유형 - 통제의 소재(내부·외부)와 자율성(통제)의 정도에 따른 구분

• 통제의 방향은 외부통제에서 내부통제로, 높은 통제수준에서 낮은 통제수준으로 이동.

구분		통제의 원천(source of agency control ; 통제의 소재)	
		내부	외부
통제 정도 (자율성 정도)	높은 통제수준 (자율성 약함)	<b>위계적(관료적 ; hierarchial) 책임성</b> • 조직 내외 상급자의 지시사항 중시 • 조직 내부통제를 통한 책임성 담보 • 효율성 중심의 책임성	<b>법률적(legal) 책임성</b> •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을 중시 • 외부감사기관의 합법성 감사를 통한 책임성 담보 • 법치(합법성) 중심의 책임성
	낮은 통제수준 (자율성 강함)	<b>전문가적(professional) 책임성</b> • 개인적 전문성과 조직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 • 개별관료와 조직단위의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성 담보 • 전문성 중심의 책임성	<b>정치적(political) 책임성</b> • 고객집단·일반대중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를 중시 • 대통령·의회의 통제와 고객만족도를 통한 책임성 담보 • 대응성(반응성) 중심의 책임성

답 ②

[관련기출] M. Dubnick과 B. Romzek의 행정책임성 유형 중 내부 지향적이고, 통제의 정도가 높은 책임성은?

2010 서울9급

- ① 정치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관료적 책임성                      ⑤ 시민적 책임성

답 ④

[관련기출] M. Dubnick과 B. Romzek이 주장한 행정책임유형 중 책임의 원천은 외부이고, 책임확보를 위한 통제의 정도가 약한 것은?

2009 군무원7급

- ① 법률적 책임                      ② 정책적 책임                      ③ 위계적 책임                      ④ 정치적 책임

답 ④

〔관련기출〕 행정책임성의 유형에 관한 다음 표의 ㉠~㉣에 적당한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통제의 원천(source of agency control)		㉠	㉡	㉢	㉣
		내부적인 통제원천	외부적인 통제원천				
통제 정도	높은 통제수준	㉠	㉡	① 관료적 책임성	② 법적 책임성	③ 전문가적 책임성	④ 정치적 책임성
	낮은 통제수준	㉢	㉣	② 전문가적 책임성	① 관료적 책임성	④ 법적 책임성	③ 정치적 책임성

답 ①

**37** 미국 클린턴(B. Clinton)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이 추구한 행정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우선주의      ② 문서주의의 지양      ③ 권한위임      ④ 내부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해설**

①②③은 클린턴 정부의 NPR 1기 개혁 당시 고어(Gore) 보고서의 4대 개혁 원칙에 포함된 내용이다.  
 ④ (×) 내부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보다는 결과 달성을 위한 권한 부여(empowering)나 권한 위임 강조.

**미국 클린턴(W. Clinton) 정부(1993~2001)의 행정개혁**

- ① **의의** : 복지국가 위기나 심각한 경기침체와의 관련성이 적은 상태에서 국정운영의 선진화라는 명제에 부합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구조나 과정보다는 행태나 문화 변수에 초점을 두는 점진적인 혁신전략** 채택. 오스본과 게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에 기반을 두고 NPR을 통해 'Works Better Costs Less(일은 잘하고 비용은 덜 드는 정부)'를 추구.
- ②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 국가업적평가단. 1992) : 정부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고어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방·지방정부 **행정관료들로 구성**. 오스본 등 소수 민간 자문관 참여. 1998년에는 NPRG(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로 전환.
- ③ **고어(Gore) 보고서의 4대 개혁 원칙(NPR 1기 개혁)**
  - ㉠ **번문욕례 제거[관료적 형식주의의 제거, 행정절차의 간소화](cutting red tape)** : 예산절차의 간소화, 인사정책의 분권화, 연방구매절차의 간소화와 조달청 권한의 부처위임, 감사관 기능의 재정립, 과잉규제의 탈피, 주정부·지방정부에 대한 권한부여.
  - ㉡ **고객우선주의(putting customers first)** : 기업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의사표현 및 선택기회 부여, 국민의 경쟁 촉진을 통한 정부독점의 포기, 시장경제원리 중시,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활용, TQM 도입, 서비스기준(service standard, 영국의 시민헌장제도와 유사) 도입.
  - ㉢ **결과 달성을 위한 권한부여(empowering employees to get results)** : 의사결정권의 분화, 모든 연방공무원의 결과에 대한 책임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단 제공, 근무생활의 질 향상, 노사협조관계 확립, 리더십의 발휘.
  - ㉣ **근본적인 감축[기본적 기능으로의 복귀](cutting back to basics)** : 불필요한 군살빼기, 세입 강화, 높은 생산성을 위한 투자확대,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계획의 재설계.
- ④ **성과관리체제의 확립**
  - ㉠ **GPRA[정부 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1993년)** : 예산을 성과와 연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 이전 정부의 주된 개혁수단이었던 계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MBO), 영기준예산(ZBB) 및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을 결집.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작성.
  - ㉡ **성과기반조직(PBO : Performance - Based Organization)** : NPR 2기 개혁 때 일부 연방기관을 영국 Next Steps의 Executive Agency(책임집행기관)와 유사한 '성과기반조직'으로 전환.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와 집행기능의 효율적 운영.
  - ㉢ **성과계약** : 성과관리를 위해 대통령과 장관 간 성과계약서 작성
  - ㉣ **정보기술의 활용, 전자정부 확립** : 전자정부 프로그램인 "Access America"를 통해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정보의 공동 활용, 고객지향적인 열린 정부 구축, 정부 포털사이트 구축, 통합민원·행정서비스 시스템 개발.

답 ④

〔관련기출〕 미국 연방정부 행정개혁에 관한 'Gore 보고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2001 5급승진

- ① 번문욕례(red tape) 제거    ② 고객우선주의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④ 기본(핵심)기능의 중시    ⑤ 권한의 하부위임

\*미국 책임운영기관(PBO)은 클린턴 정부 NPR 2기 개혁 때 설치

답 ③

**38**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적 책임성은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한다.
- ②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반한 능동적인 책임성을 의미한다.
- ③ 제도적 책임성은 법규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강조한다.
- ④ 제도적 책임성은 수동적인 행정책임을 의미한다.

해설

① (×) 자율적 책임성은 문책자의 내재성 또는 부재, 제재의 부재(양심의 가책만 느낌)를 특징으로 한다.

▣ 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과 자율적 책임(responsibility)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 = 객관적 책임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 = 주관적 책임
공식적인 각종 제도적 통제를 통해 국민에 의해 표출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정부와 공무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b>타율적 수동적인 행정책임</b> . 전통적으로 의원내각제인 영국의 경우는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제인 미국은 법적 책임을 강조	공무원이 <b>전문가로서 직업윤리와 책임감</b> 에 기초하여 <b>적극적·자발적인 재량을 발휘</b> 해 확보되는 행정책임. 공무원이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재량을 발휘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택하고,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b>대응성에 기초</b> )
외부로부터 부과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b>타율적·수동적·객관적 책임</b>	인간내부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b>자율적·능동적·주관적 책임</b>
<b>문책자의 외재성, 제재의 존재</b>	<b>문책자의 내재성 또는 부재, 제재의 부재</b> (양심의 가책만 느낌)
<b>절차의 중시</b>	<b>절차의 준수와 책임완수는 별개의 것</b>
<b>공식적·제도적 통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b>	<b>공식적 제도로 달성 못함. 객관적으로 확정된 기준 없음.</b>
Finer의 행정책임론과 관련	Friedrich의 기능적(functional)책임성과 연계

답 ①

[관련기출]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 바른 것은?

2007 서울7급

- ①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별개로 본다.
- ② 공식적 제도에 의해 달성할 수는 없다고 본다.
- ③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가 전제가 된다.
- ④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 ⑤ 제재가 불가능하거나 문책자가 내재화된다.

답 ③

[관련기출] 제도적 책임성(accountability)과 대비되는 자율적 책임성(responsibility)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10 국가9급

- 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에 기초해서 적극적·자발적 재량을 발휘하여 확보되는 책임
- ② 객관적으로 기준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내면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는 것
- ③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 ④ 고객 만족을 위하여 성과보다는 절차에 대한 책임 강조

답 ④

39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책임행정이 약해진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의 보완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이다.

해설

① (○) 중앙행정기관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므로 주민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가 곤란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중 다음 항목에 유의할 것

장점	단점
<b>행정의 전문성·통일성 확보</b>	<b>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b>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원칙 중 종합성 원칙 저해.
<b>지역별 특성 반영</b>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b>행정의 민주성·책임성(책임행정) 저해</b> , 지방자치의 저해
<b>근린행정</b> :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b>현지성</b> (주민참여와 주민의 효과적인 통제 하에서 스스로 처리) <b>확보 곤란</b>
<b>현장에서의 신속한 업무처리</b>	행정절차가 복잡해지고 <b>신속한 결정 곤란</b>

- ②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현지성 확보가 어렵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원적 업무수행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다(지역 단위에 기능중심의 일선기관과 지역 중심의 자치단체가 공존·혼재하는데 따른 혼란).
- ③ (×) 지방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경비 증가와 인력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정부규모를 확대시킨다.  
\* 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에 대해 기능적으로 전문성을 살려 복잡한 행정문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기도 함.
- ④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특별지방관리라고도 하며 대부분 시·군의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속별 유형

<b>국가(중앙행정기관) 소속</b>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 <b>예</b> 경찰청의 경찰서,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우정청, 환경부의 유역환경청 등
<b>지방자치단체 소속</b>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특정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특별행정기관. <b>예</b>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원(장), 교육감, 교육장 등 ※ 소방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소방본부나 소방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안전부의 소방청은 정책기능만 담당.

답 ①

**[관련기출] 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국회9급 / 2019 경찰간부

- ①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집행기관이다.
- ② 특별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 집행과 광역적 추진에 효과적이다.
- ③ 특별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④ 특별행정기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측면에서 볼 때 자치단체인 일반행정기관의 책임행정 구현에 공헌한다.
- ⑤ 특별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된다.

답 ④

**[관련기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 ①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이 있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아 책임행정이 결여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 ④ 중앙부처의 할거성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지방의 종합행정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다.

답 ④

**[관련기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 소방간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출입국관리, 노동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렵다는 책임행정의 결여 문제가 있다.

답 ③

**[관련기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나타나는 장점으로 옳은 것은?** 2013 행정사

- ① 주민의 직접참여와 통제가 용이하여 책임행정 확보가 가능하다.
- ② 광역적인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유사중복기능의 수행 인력과 조직으로 행정의 중복성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관할범위가 넓어 현지성이 확보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능하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증가로 이원적 업무수행이 가능하여 주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답 ②

**[관련기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가9급

- ①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 ② 출입국관리, 공정거래, 근로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답 ①

**[관련기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서울9급

-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의 명확한 역할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답 ⑤

**40 다음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취득세                                      ②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④ 레저세

**해설**

**지방세의 종류**

과세주체		보통세(9개)		목적세(2개)	
광역자치단체	특별시세·광역시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 세	등록면허세			
기초자치단체	시·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답 ②

**[관련기출] 현행법 상 지방세목 중 목적세는?**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① 등록면허세                                      ② 담배소비세                                      ③ 자동차세                                      ④ 레저세                                      ⑤ 지역자원시설세

답 ⑤

**[관련기출] 지방세로서 보통세인 것은?** 2007 서울7급(수정)

① 담배소비세                                      ② 농어촌특별세                                      ③ 지방교육세                                      ④ 소득세                                      ⑤ 지역자원시설세

답 ①